

12월 둘째 주(12.4-12.10)

[지역경제] 미국 금리인상 충격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절실

[지역경제] 동해안권 6개 지자체,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발족

[금융] 한국은행,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미흡"으로 금리동결

[거시] 한은 및 정부,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발표

□ [지역경제] 미국 금리인상 충격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절실

○ 12.10. 'DTI상한 내려 가계대출 고삐 죄야' (KDI 경제전망 자료 및 서울경제 외 3개 기사)

○ 주요 내용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 충격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현상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지적함
-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높아진 총 부채 상환비율(DTI) 상한선(현재 60%)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우리나라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은 166.9%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고령층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퇴시점 이전에 상당부분 상환되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해야 함
- DTI 규제적용 사각지대로 최근 집단대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 신용평가 심사강화를 통해 상환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함의 및 전망

- 현 가계부채 위기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인하와 DTI와 LTV 기준을 완화한 결과로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심화를 불러일으킴
- 현 정부는 출범 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의 기조로 되돌아가, 가계부채 완화를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을 추진해야 함

□ [지역경제] 동해안권 6개 지자체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발족

○ 12.10.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동반성장 의기투합' (한국일보 외 3개 기사)

○ 주요 내용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의 강원동해안 6개 시장 및 군수는 12월 9일 삼척시청에 모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함
- 협의회는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서자'라는 구호를 채택하여, 동해안 시·군이 공동 추진할 10개 상생·협력 발전과제에 대한 협약식을 가짐
- 10대 과제로, 해안침식 대응, 산림피해 예방, 동해안 군 철책선 철거, 관광마케팅 공동 수립,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선제적 기후변화 대책, 동해북부선 국가철도망 구축, 해수욕장 주차료·시설사용료 등의 유료 및 일원화,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참여, 문화·예술 교류활성화를 발표함
- 구체적으로, 동해 삼척 간 해안침식(해면 223km 중 41km 유실) 갈등을 적극 중재하여 해결하고, 원인 규명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등에 힘을 합하기로 함
- 30만ha 이상인 동해안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예방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협력과 더불어, 161km에 달하는 군 경계 철조망 철거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함
- 각 지역 간 경쟁적으로 진행한 관광마케팅 사업도 '동해안'이라는 틀로 묶어 통합 관광 누리집과 관광 앱을 개발하기로 함

○ 합의 및 전망

- 그간 동해안 지역은 지정학적인 잠재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보환경에 따른 각종 규제에 의해 낙후를 면치 못하였음
- 현재 6개 시·군에는 전국의 1.1%에 불과한 51.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14.6%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짐
-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영서권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상생발전을 기대함

□ [금융] 한국은행,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미흡"으로 금리동결

○ 12.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발표

- 11.29. 한국은행, 「2015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 11.30. 한국은행 「2015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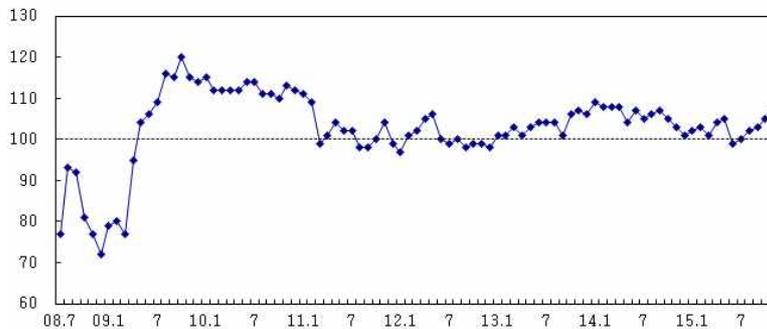
○ 주요내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세계경제, 실물경제, 물가, 금융시장에 대한 고려를 통해 마련된 것임. 이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 볼 대목은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임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음. 다만, "앞

으로 국내경기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함

- 금번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가 핵심 문구로, 이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명시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라는 문구가 변경된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이라는 언급은 「2015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와 「2015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근거한 것임.
-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 중 106으로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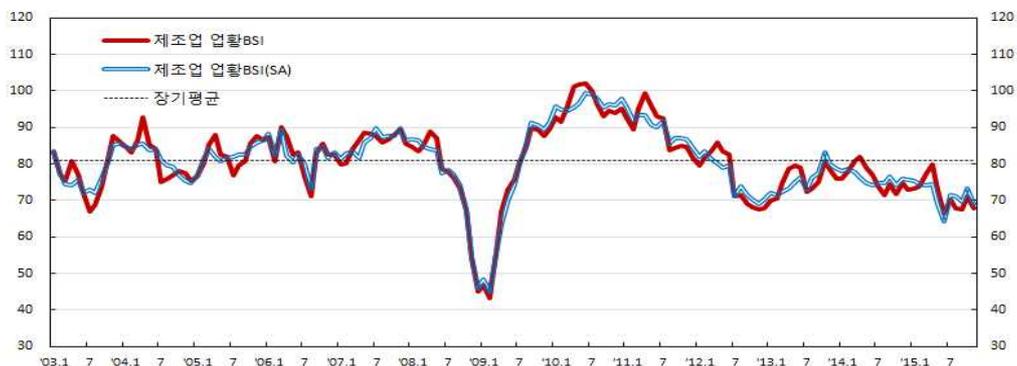
<그림> 소비자 심리지수 변화(2008.7-2015.11)



참조)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2014년 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가 소폭이나마 점차 개선되는데 비해 기업(제조업, 비제조업)과 경제심리지수(ESI)는 하락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상황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먼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11월 업황BSI는 68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12월 업황 전망BSI도 69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월대비 각각 2p, 3p 하락하였으며,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전월대비 각각 6p, 2p 하락하였음

<표> 제조업 업황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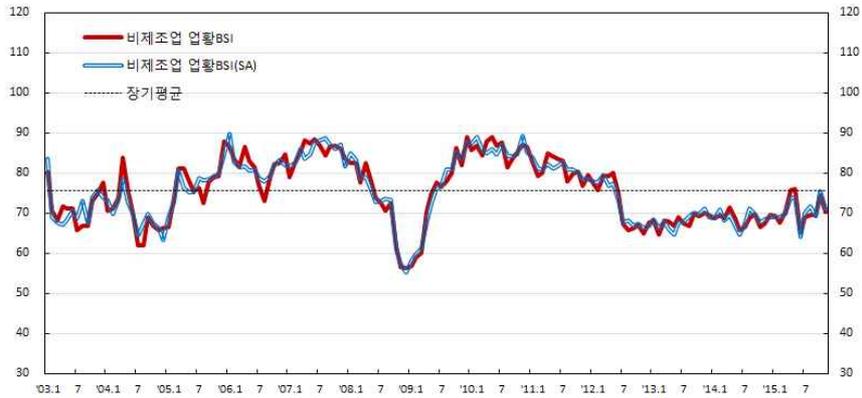


* 「좋은」 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 응답업체 구성비(%) + 100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비제조업의 11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4p 하락하였으며,

12월 업황 전망BSI도 71로 전월대비 2p 하락

<표> 비제조업 업황BSI



-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나, 순환변동치는 95로 전월과 동일.

<표> 11월 경제심리지수(ESI)



○ 함의 및 전망

-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문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미흡”이라는 표현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제조업, 비제조업의 경기실사지수는 모두 하락하였으나, 소비자 심리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한 것은 부적절함. 소비자심리가 개선된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분의 심리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평균을 내듯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심리상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의 정책 시그널을 잘못 판단할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정적 상황인식은 경기개선을 지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와 전망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거시] 한은 및 정부,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발표

- 12.10.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발표
- 12.9. 기획재정부, 「'15.12월 최근경제동향」 발표
- 12.8. 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발간

○ 주요 내용

- 주요국 경제

미국: 10월 산업생산과 11월 제조업지수는 대외수요 부진, 달러화 강세로 하락한 반면, 설비투자·주택투자·소비판매 확대 등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양상

유로: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회복세 미약

중국: 10월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소매판매 증가한 반면 생산 및 투자 성장 둔화와 함께 수출은 감소세

일본: 10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는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감소하여 회복세 미약

- 10월 소비·투자

소매판매: 비내구재(음식료 등)는 감소한 반면, 내구재(승용차 등) 및 준내구재(의류 등) 판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전월대비 3.1% 증가

설비투자: 기계류는 증가한 반면 운송장비 투자 감소로 전월대비 0.8% 감소

건설투자: 건축공사, 토목공사 모두 기성 감소하여 전월대비 7.8% 감소

재 정: 3/4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6.3조원 적자기록

- 10월 생산활동

제조업: 금속가공, 통신·방송장비는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 자동차, 식료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1.2% 감소

서비스: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증가

고 용: 전체 고용률은 60.9%로 9월과 동일(15~64세 고용률은 66.2%로 9월보다 0.1%p 증가)하고 실업률(계절조정)은 3.4%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7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2천명 증가

고용 동향(천명)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실 업 자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계	농림 어업	제 조 업	건 설 업
				상용	임시	일용	자영	무급				
9월	27,129	15,990	866	12,757	5,170	1,541	5,593	1,203	26,264	1,489	4,512	1,838
10월	27,137	16,012	839	12,801	5,208	1,520	5,571	1,199	26,298	1,484	4,552	1,824
증감	8	22	-27	44	38	-21	-22	-4	34	-5	40	-14

자료: 노동연구원

- 11월 수출입

수출(444.3억달러): 비IT제품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나 IT제품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여

전년동월대비 4.7% 감소

수입(340.7억달러):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세 지속, 자본재 수입이 감소로 전환되어 전년 동월대비 17.6% 감소

-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로는 0.6%(9월) 0.9%(10월) 1.0%(11월)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0.2%(9월), 0.0%(10월), -0.1%(11월) 하락.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전월대비 0.1% 상승.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모두 오름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5% 상승하고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월대비 0.6% 상승

- 11월 국제유가

OPEC의 높은 원유생산량 지속 및 이란의 원유생산 확대 전망, 미국의 높은 원유 재고량, 세계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9.3% 하락(월평균, Dubai 기준)

- 11월 원자재가격

곡물가격: 양호한 기상여건, 세계 재고량 전망치 상승 등으로 하락

비철금속가격: 주요국의 수요 둔화 우려, 공급증가 전망 등으로 하락

○ 함의 및 전망

- 유럽과 일본의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에 시각 차이가 존재함 (유럽에 대해서는 한은은 회복세 유지, 기재부는 회복세 미약하다고 보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한은은 회복세 미약, 기재부는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봄). 제시된 지표를 통해서 보면 기재부의 판단이 좀 더 적절해 보임

- 소매판매 증가는 정부의 소비 진작책(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단기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산업별 생산 및 수출 또한 업종별로 증감, 등락을 반복하여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음. 고용 동향 또한 실업은 감소했으나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고용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물가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이 있으나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불안한 양상을 보임

-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예상을 계속 하회하고 내수 및 수출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금리 인상기에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증가 및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